

# 환경상생 동참기업 향후 4년간 1,500개선 확대 목표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협약 체결

10. 23(월) 11:00, 르네상스호텔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대기업 대표들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산자부는 환경분야 상생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10. 20(금)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까지 “모기업 30개, 1차 협력업체 400개, 2, 3차 협력업체 1,000개”로 확산목표를 제시하였다.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은 EU등 주력 수출시장의 국제환경규제 확대에 대응하여, 모기업과 부품·소재 협력업체간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된 사업으로, 모기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을 통한 시장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협력업체는 환경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모기업과 장기적·안정적 구매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내년 8월부터 EU에서 시행 예정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최근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환경분야 협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참여 모기업은 시범사업 참여 협력업체가 원가절감, 폐기물 저감(평균 10% 내외)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전체 협력업체로 확산하고, 모기업이 핵심이해관계자인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 차원에서 확산계획을 수립,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시범사업 참여 모기업이 전체 협력업체의 환경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정부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이 전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LG전자의 경우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와 함께 100개 1차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안전·보건관련 진단지도, 기술이전 등을 실시하고, 50개사의 환경보고서 발간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포스코의 경우 우선 협력업체 26개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산자부가 확정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제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정밀화학,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섬유, 유통 등의 산업분야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 참여 대상업종 확대(중전 6개 → 총 10개 : 정밀화학, 조선, 섬유, 유통)

특히 환경분야 상생협력을 2, 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기 위해 “모기업 ↔ 1차 ↔ 2, 3차”로 연결되는 수직적 그린파트너십 체계를 구축을 위해, 국제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전기전자 및 자동차분야 2, 3차 협력업체 160개사를 대상으로 '06.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1차 협력사가 5개 내외의 2, 3차 협력사를 지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자발적 확산에 참여함에 따라 환경분야 상생협력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간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머물렀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하였다.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

### I. 추진배경

© EU,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력 수출시장에서 제품 자체의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

- 4대 주력시장 전체수출의 63.2%('05년 1,709억불 중 1,080억불)가 국제환경규제에 노출되어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차질 우려

※ '01. 12월, SONY의 게임기 전선피복의 카드뮴 과다함유로 네덜란드 세관이 통관을 거부(제품 전량회수로 인해 1.6억불의 경제적 손실 발생)

◎ 국제환경규제가 집중되는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은 부품·소재의 환경성이 완성품의 환경성 보장의 관건

- GM, SONY 등 해외 선진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경우, 녹색구매체제 도입 등 협력업체 공급망 환경관리를 강화중인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기술, 정보 등의 부족으로 국제환경규제 대응능력이 취약

※ 중소기업 환경규제대응 실태조사 결과('05.11월, 중소기업중앙회), 규제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13.5%에 불과,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49.6%) 및 '인력부족'(16.5%) 제시

◎ '03년부터 정부지원 아래 환경규제대응 상생협력 프로그램인『대·중소 그린파트너십 1차 시범사업』을 추진

- 참여 중소 협력업체는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모기업은 국제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둠

※ 환경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단계적으로 순산업계로 확산하기 위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을 수립·시행

## II. 추진현황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 :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급망(Supply Chain)을 활용하여 모기업이 환경경영체제 구축 노하우, 공정진단지도, 청정생산 기술이전 등을 종합 지원하여 협력업체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지원

※ 공급망환경관리(SCEM : 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 '03~'06년, 6개업종(전기전자, 자동차, 제지, 철강, 석유화학, 식품)의 8개 모기업, 122개 1차 협력업체가 참여 (전체협력업체의 1.8%)

※ 삼성전자(15), LG전자(15), 삼성SDI(22), 현대자동차(15), 유한킴벌리(14), 포스코(20), SK(10), 풀무원(11)

※ ( )내는 참여 중소기업수

• 사업별 3년 소요, 총 소요자금 150억원(정부 92억원, 민간 58억원)

※ '06년 6~8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등 5개 사업 종료

◎ 모기업은 녹색구매 지침, 환경관리 온라인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협력업체의 환경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동시에, 공정진단·지도 및 청정생산·환경경영 교육 등 협력업체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

• 협력업체로부터 양질의 친환경부품·소재를 공급받아 환경규제에 적합한 완제품을 생산



◎ 협력업체는 환경경영체제의 정착 및 친환경부품·소재 생산기반 구축

- 모기업과의 장기적·안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기업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 III. 그간의 성과

◎ 전자업체의 경우 EU의 RoHS에 대응한 친환경부품·소재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규제로 인한 수출 차질을 사전 예방

※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전자제품내 납, 수은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06.7~ )

◎ 참여 협력업체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종료(3年) 후 매년 54.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사업종료 1.3년후 투자회수가 가능

※ 현대차, 유한킴벌리, SK의 39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분석  
- 사업종료시점에서 정부·모기업·협력사 117억원 투자, 협력사 48억원 비용절감

- 사업종료후 5년간 예상수익 현재가치(NPV)는 163억원 투자수익률(ROI)은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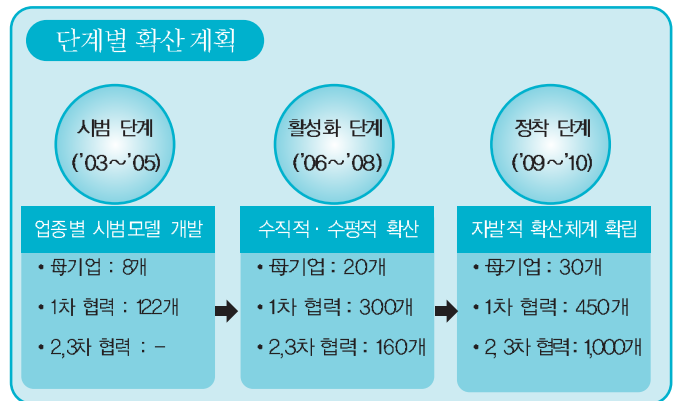
• 환경적으로는 참여 협력업체 대부분이 폐기물 발생량 저감(평균 10% 내외), 에너지절약 및 작업장 환경개선 성과 달성

- 협력업체 122개사중 105개사가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 모기업이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간 신뢰관계 구축

• 단기적인 계약관계를 長期적인 협력관계로 발전, 모기업-협력업체간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

## IV.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계획('07~'10)



※ 참여업체수는 누적하여 확산, 1차 협력업체수는 정부지원 신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수

### 확산전략 및 실행계획

구분	확산 전략	실행 계획
기존 참여기업의 지원대상 확대 (기존 6개업종)	• 시범사업 참여 모기업의 지원대상 1차 협력업체 수를 확대 ※ 모기업당 협력업체 : (기존 15개사 → (개선) 50협력사	• 시범사업 참여 모기업과 '자발적협약' 체결 ⇒ 모기업 자체자금 투입
미참여 모기업 참여 지원 (기존 6개업종)	• 업종별 그린파트너십 표준모델 보급 - 기존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게 그린파트너십 노하우 이전	•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학습조직' 운영 ⇒ 예산 지원
시범사업 업종 확대	• 국제환경규제 대응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범위 확대 ※ 대상업종 : (기존 6개 → (개선) 10개 ※ 조선, 정밀화학, 섬유, 유통 추가	•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전산업에 걸친 환경규제 대응체계 구축 ⇒ 예산 지원
2,3차 협력업체 그린파트너십 구축	• 모기업 ↔ 1차 ↔ 2,3차로 이어지는 그린파트너십 확산체계 구축 ※ 1차 협력업체당 5개 내외의 2, 3차 협력업체 지원	•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에 시범 실시 ⇒ 예산 지원

#### 1. 기존 참여기업의 지원대상 확대 유도

◎ 시범사업 참여 1차 협력업체(122개)는 전체 협력업체의 1.8%에 불과

- 모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축적한 그린파트너십 노하우를 전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확산 추진
- 1차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요재원은 모기업 자체부담

- 정부는 모기업의 자발적 확산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모기업(6개)과 산업자원부간 “환경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자발적협약” 체결(10.23)

### 2. 시범사업 未참여 모기업의 참여 지원

◎ 시범사업 未참여 모기업이 그린파트너십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의 이전확산 체계를 마련

- 모기업 환경담당자간 ‘그린파트너십 확산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학습조직으로 운영(기 시범업종 5개 분야)

- 시범사업 기업이 未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그린파트너십 노하우 이전

- 업종별 표준화된 그린구매지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기전자, 자동차 등 既 시범업종의 경우에도 국제환경규제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3. 시범사업 대상업종 확대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참여 대상업종 확대('07~ )

- (기존)6개 업종 → (신규)4개 업종(정밀화학, 조선, 섬유, 유통)

- 대상업종 선정기준

- 정밀화학 : 국제환경규제(REACH) 대응 시급

- 조선 : 선박도장시설 개선 및 유해물질 발생 억제

- 섬유·유통 : 소비자 안전과 직결

◎ 사업실시 및 성과 분석후 추가 확대여부 검토

### 4. 2, 3차 협력업체로 그린파트너십 참여범위 확대

◎ 2, 3차 협력업체의 경우 사출·도금·도장 등 영세업체가 多數이며, 대부분 1차 협력업체의 환경관련 요구에 임시적·수동적 대응 수준

-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인력, 자금, 기술 등의 부족으로 인

해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련 지원 역량이 취약

◎ 부품·소재의 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전기전자, 자동차 분야 2,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그린파트너십 구축 시범 추진('06~'08)

- “모기업 ↔ 1차 ↔ 2, 3차” 로 연결되는 수직적 그린파트너십 체계를 구축

- 1차 협력사별로 5개 내외의 2, 3차 협력사를 선정·지원

◎ 1차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정부와 모기업이 보완·지원

- 1차 협력업체 : 2, 3차 협력업체 그린구매 실시, 협력사 환경성과평가

- 모기업 : 그린파트너십 노하우를 이전, 1차 협력업체의 2, 3차 협력업체 지원실적을 평가, 구매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공

- 정부 : 환경보고서 발간 및 컨설팅인력 지원

### 5.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기반 조성

◎ 협력업체의 그린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유인체계 구축 추진

- 청정생산설비 도입 등 그린파트너십 참여 협력업체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우선 지원

- 금융권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홍보하는 기업IR 개최('07.2)

◎ 협력업체의 그린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환경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우대 지원

- 환경관련 기술개발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국가환경경영대상('07. 6)』, 『대·중소 상생협력대상('06.12)』등 그린파트너십 참여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실시

◎ 환경경영 전문컨설팅 Pool 확대를 위해 환경경영진단·지도기관 지정 및 환경경영전문진단·지도 컨설턴트 교육 실시